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류 병 윤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류병윤(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1. 서론

올 들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토론회가 유행이다. 이 유행은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증가 및 사회적일자리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경제의 일 부분인 사회적기업의 증가와 발전만으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규정할 수 없으나, 우리의 현실 여건상 법과 제도, 정책과 재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현실적 존재와 나름의 성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의 현재적 의미를 논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범위도 정해져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사회적기업이 인증, 육성되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특성과 경제적, 사회적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의 사회적기업의 특성(사업분야, 사업내용)을 분석해 지역밀착형이란 개념규정에 따른 적합성과 영향력이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한 시금석으로 태어나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착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고용비중과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못지않게 지역밀착형으로 대변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역할과 비중이 있는지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밀착형이란 용어의 개념을 지역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지역의 주체나 지역의 주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기업적 방식이나 사회운동에 의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문제'의 특징을 파악, 분석해 비즈니스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의 발굴, 지역자원의 연계와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전통과 정서의 회복 등 지역과 밀착한 사업 기회의 확보가 시급하다.

2. 대구경북지역 현황

1) 일반 행정현황 및 경제지표

대구현황

- 인구·면적('09.12월말 기준)
 - 인구: 2,509천명
 - 면적: 884.07km²
 - 행정구역: 8개 구·군(7구 1군) 143 읍·면·동
- 예산규모('11당초) / 재정자립도 53.5%
 - 광역시 5조 4,242억원 (일반회계: 3조 6,538억원, 특별회계: 1조 7,704억원)
 - 구군 2조 601억원 (일반회계: 2조 86억원, 특별회계: 515억원)
- 주요 경제지표
 -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09): 2,869개/종사자수: 95,272명/생산액: 20조924억원
 - 경제활동인구: 121만 8천명
 - 지역내 총생산('09): 32조 9,170억원(전국의 3.1%)
 - 1인당 지역총생산액('09): 1,346만9천원(전국 평균 2,187만원, 16위)
 - 수출액('09): 51억9,300만불(전국의 1.1%)

경북현황

- 인구·면적('10.06월말 기준)
 - 인구: 2,705천명
 - 면적: 19,029km²(전 국토의 19.1%, 전국 1위)
 - 행정구역: 23개 시·군(10시 13군) 331 읍·면·동
- 예산규모('11당초)
 - 도 5조 4,509억원 (일반회계: 4조 6,625억원, 특별회계: 7,884억원)
 - 시군 9조 9,645억원 (일반회계: 8조 3,351억원, 특별회계: 1조 6,294억원)
- 주요 경제지표
 - 산업구조: 1차 23.1%, 2차 16.1%, 3차 60.8%(09년 취업자 기준)
 - 지역내 총생산('09): 69조 1,854억원(전국의 6.5%, 4위)
 - 1인당 지역총생산액('09): 2,655만원(전국 평균 2,187만원, 4위)
 - 수출액('09): 385억불(전국 10.6%, 5위)

2) 지역사회 취약계층 현황과 경제활동 상황

대구경북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와 함께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4.6%에서 2005년 16.9%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북지역의 경우 20.8%에서 23.5%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들은 저소득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의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의 독거노인 비율은 울산이나 부산, 광주보다는 비율이 낮은 반면, 인천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경북의 독거노인 비율은 다른 도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제주와 경남,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또한 대구와 경북 모두 전체 인구 중 상대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대구의 장애인 수는 113,506명, 경북은 162,818명으로 2003년 71,066명, 98,103에 비해 각각 42,440명과 64,715명이 증가하였다.

<표 1>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등록수(단위:명)

연별	대구	경북
2 0 0 3	71,066	98,103
2 0 0 4	77,899	108,654
2 0 0 5	85,265	119,814
2 0 0 6	93,481	132,381
2 0 0 7	100,082	143,009
2 0 0 8	106,448	151,898
2 0 0 9	113,506	162,818

자료: 대구시청, 대구통계, 경북도청, 경북통계 참조, 김성숙(2010) 재인용

2006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사업체 본사 기준에 의한 서울지역의 장애인근로자는 3만 1천명, 경기지역은 2만 5천명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45.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률은 제주(2.68%), 강원(2.59%), 충북(2.27%), 대전(2.23%)지역이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구지역은 1.38%, 경북은 1.60% 수준에 불과하여 대구경북권내 장애인의 고용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지역별 장애인근로자수 및 고용률 추정(2006)

(단위 : 개, 명, %)

지역별	전 체		장 애 인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전체	2,958,427	9,344,841	64,262	124,432	1.33
서울	622,368	3,482,333	10,759	31,445	0.90
부산	259,831	625,322	5,647	9,211	1.47
대구	187,240	396,226	2,858	5,475	1.38
인천	141,198	383,646	2,735	6,092	1.59
광주	92,302	211,120	1,753	2,948	1.40
대전	78,436	203,959	2,747	4,545	2.23
울산	57,770	220,089	1,010	2,588	1.18
경기	570,521	1,707,423	14,452	24,777	1.45
강원	110,886	196,735	3,732	5,093	2.59
충북	84,960	214,593	3,178	4,876	2.27
충남	120,762	275,319	2,471	4,569	1.66
전북	112,386	244,817	1,945	3,535	1.44
전남	118,326	207,475	1,642	2,905	1.40
경북	183,151	404,795	3,857	6,481	1.60
경남	180,963	504,783	4,257	8,117	1.61
제주	37,327	66,205	1,218	1,775	2.68

주: 1) 고용률=(장애인근로자/상시근로자)*100, 2) 지역은 본사 기준임.
자료: 김성숙(2010)

2010년 현재 대구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1,843세대에 31,09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모자가정이 82%(9,394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자가정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대구 경북지역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현황

연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국가보훈법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대구	2005	5,858	15,667	1,977	5,147	3,881	10,520
	2006	5,983	16,135	2,207	5,668	3,776	10,467	-	-
	2007	6,322	16,690	2,304	5,900	4,018	10,790	-	-
	2008	6,968	18,342	2,579	6,643	4,385	11,699	4	-
경북	2005	8,300	22,131	2,475	6,140	5,825	15,991
	2006	9,662	25,519	3,020	7,544	6,640	17,970	2	5
	2007	10,128	27,011	3,319	8,398	6,808	18,611	1	2
	2008	10,783	28,438	3,654	9,222	7,125	19,206	4	10

자료: 대구시청, 대구통계, 경북도청, 경북통계 참조. 김성숙(2010) 재인용

2008년 대구경북지역의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구가 51,142가구의 100,113명이고 경북이 72,408가구에 124,5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지역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경북지역은 4.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수급률은 울산의 1.7%, 서울 및 경기의 1.8%, 인천의 2.4%, 그리고 전국평균 2.9%에 비

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반수급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대구의 일반수급자 가운데 실직 및 미취업자는 일반수급자의 8.8%, 경북은 5.7%로 전국 7.8%와 비교해 보면, 대구가 조금 높지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대구의 일반수급자의 상시고용 비중은 0.95%로 전국의 0.84%에 비해 높으며, 경북의 일반수급자의 상시고용비중은 0.83%로 전국 수준이다.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 및 미취업자가 차지하는 실업율은 대구의 경우 33%이고 경북은 26.6%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가운데 1/3, 1/4이 실업상태에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율이 일반 평균에 비해 높고 고용지위 등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4>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단위: 가구, 명)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전 국	854,205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서 울	115,574	206,133	115,574	193,260	12,873
부 산	78,689	138,890	78,689	131,778	7,112
대 구	51,142	100,113	51,142	94,220	5,893
인 천	38,069	69,786	38,069	66,523	3,263
광 주	29,705	61,339	29,705	58,288	3,051
대 전	23,703	46,635	23,703	43,621	3,014
울 산	10,914	18,741	10,914	17,701	1,040
경 기	120,653	207,821	120,653	197,112	10,709
강 원	37,679	64,679	37,679	61,716	2,963
충 북	31,686	57,400	31,686	52,306	5,094
충 남	41,689	74,105	41,689	69,237	4,868
전 북	61,896	115,093	61,896	109,630	5,463
전 남	65,839	114,922	65,839	109,062	5,860
경 북	72,408	124,538	72,408	117,897	6,641
경 남	62,779	106,597	62,779	100,559	6,038
제 주	11,780	23,147	11,780	21,100	2,047

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제외한 수치임.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김성숙(2010) 재인용

2) 지역사회 산업경제 현황과 인구이동

대구경북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단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의 사업체수가 많다. 폐기물및환경복원업, 영상및정보서비스업이나 금융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예술및스포츠서비스업 등에서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매우 낮다.

특히 자연환경 관련 산업이 중요한 경북지역의 농업, 임업, 어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는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

다. 농업, 임업, 어업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서비스업의 발달이 중요한데, 산업분류상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이나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131개 사업체에 1,514명의 종사자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적 특성이 미약하다(김성숙, 2010).

대구지역 또한 20~30대 청년층의 대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각 대학 병원 인턴 경쟁률 현황 보면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가 정원을 겨우 채웠고, 올해는 92명 모집에 98명이 지원하였다.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모집정원에 미달하거나 겨우 채웠는데 올해의 경우 각각 51명 모집에 49명 지원과 39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하였다.

대구지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자 비율을 살펴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정원 120명(2009년)에 83명(69.2%)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2010년에는 정원 130명 모집에 73명(56.2%)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정원 70명(2009년)에 50명(71.4%)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2010년에는 같은 정원에 61명(87%)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매일신문, 2011. 2. 25).

지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흡수할 만한 기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 없는 것도 20~30대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취업 전부터 서울 유학길에 올라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는 대학생과 연봉이 더 높은 대구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향하는 직장인 등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산업과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 지역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보면 대구가 3.1%, 경북 3.3%를 나타냈으나, 2011년 1~2월 들어서는 4%대 물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어 물가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채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르는 수입 감소보다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에 의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며, 섬유산업의 특성상 원료비 중 유가에 대한 비중이 높으므로, 유가 변동은 수익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유가 20% 상승 시 생산비는 1.56% 상승하는데 반해 제품가격은 0.08% 상승에 그쳐, 1.15% 정도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게 된다(대경CEO Briefing, 2011. 1. 17).

더욱이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요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철강 등의 경우 생산비 상승 폭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반면 제품 가격 인상률은 낮아 채산성 악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수출 감소율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물가 등 지역경제상황은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을 고용해 기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3. 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한계

1) 사회적기업 성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서, 구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형태의 비영리조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사업들이 시행되었다. 특히, 2003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당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표적 노동복지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지원을 행하고 있다(김순양, 2010).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문제와 정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주변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거창하지 않은 소중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포함하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형태를 보인다. 나아가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지역문제를 어떻게 추출하는가에 집중되어 나가고 있다(김성숙, 2010).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주요 활동분야는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문화분야가 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식품분야로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조 8%, 환경 7%, 사회복지 4%, 재활용 2%, 가사·간병 2%이며, 기타가 13%였다.

<표 5>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등의 구체적 활동분야

분야 \ 관할지	경북- 사회적기업	경북-예비 사회적기업	대구- 사회적기업	대구-예비 사회적기업	총합계	
가사	1	-	-	-	1	2
간병	-	-	1	-	1	
교육	1	6	1	4	12	13
교육(체험)	-	-	-	1	1	
돌봄	-	-	-	1	1	13
돌봄(가사)	-	3	-	-	3	
돌봄(가사간병)	-	-	-	2	2	
돌봄(보건)	-	-	-	1	1	
돌봄(보육)	-	1	-	3	4	
돌봄(재활치료)	-	-	-	1	1	

돌봄(치료)	-	-	-	1	1	20
문화	1	3	1	2	7	
문화(공연)	-	2	1	1	4	
문화(여행)	-	-	-	1	1	
문화(체험)	-	7	-	-	7	
문화(체험교육)	-	-	-	1	1	3
보육	1	-	-	-	1	
사회복지	-	2	-	-	2	13
식품	1	5	3	2	11	
식품(로컬푸드)	-	-	-	1	1	
식품(음식)	-	-	-	1	1	2
재활용	2	-	-	-	-	
제조	1	2	2	-	5	7
제조(친환경)	-	-	1	-	1	
제조판매	-	-	1	-	1	
환경	2	-	1	-	3	6
환경(재활용)	-	2	1	-	3	
기타	2	4	2	4	12	91
총합계	12	37	15	27	91	

주: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김성숙(2010)

고용인원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수를 보면, 10명이하가 30%이고, 11~15명이하가 35%, 16~20명이하가 21%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20명 이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표 6> 고용인원수 별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등의 수

인원	경북-사회적기업	경북-예비	대구-사회적기업	대구-예비	총합계
5		2		2	4
7		1			1
8				1	1
10	1	11	2	5	19
11	1	4			5
12		6		1	7
13		1		2	3
14	1				1
15	2	4	1	7	14
16	2	2		2	6
18		1	1	1	3
19				1	1
20	2	3	1	2	8
25			1	1	2
31			1		1
35		1	2		3
40		1		1	2
41			1		1
45				1	1
50			1		1
90			1		1
총합계	9	37	12	27	85

주: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김성숙(2010)

또한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 단체유형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은 30개 업체로 33.3%, 비영리법인은 11개 업체로 12.2%, 사단법인은 20개 업체로 22.2%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이 69개 업체로 75.6%나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5개 업체(5.6%), 사회복지시설은 6개 업체(6.7%)로 사회복지기관이 11개 업체로 12.3%에 불과하였고, 협동조합과 기타가 각각 1개 업체였다. 이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근로시설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비율이 높아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유형(빈도, %)

단체유형	경북- 사회적기업		경북- 예비사회적기 업		대구- 사회적기업		대구- 예비사회적기 업		총합계	
법인내사업단	0	0.0%	1	2.8%	4	26.7%	3	11.1%	8	8.9%
비영리민간단체	1	8.3%	11	30.6%	5	33.3%	13	48.1%	30	33.3%
비영리법인	0	0.0%	8	22.2%	0	0.0%	3	11.1%	11	12.2%
사단법인	2	16.7%	9	25.0%	3	20.0%	6	22.2%	20	22.2%
사회복지법인	2	16.7%	3	8.3%	0	0.0%	0	0.0%	5	5.6%
사회복지시설	1	8.3%	4	11.1%	0	0.0%	1	3.7%	6	6.7%
주식회사	6	50.0%	0	0.0%	2	13.3%	0	0.0%	8	8.9%
협동조합	0	0.0%	0	0.0%	0	0.0%	1	3.7%	1	1.1%
혼합형	0	0.0%	0	0.0%	1	6.7%	0	0.0%	1	1.1%
총합계	12	100.0%	36	100.0%	15	100.0%	27	100.0%	90	100.0%

주: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김성숙(2010)

2) 생활협동조합의 성과

대도시인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인 농산물 판매 관련 생활협동조합(생협)과 직거래 단체가 지난 1990년부터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는 지역 동질의식이 강하고, 지리상 인접해,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임산물을 대구지역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생협사업이 비교적 용이한 사회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13개의 생협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1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200여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적경제 범위와 영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표 8> 대구(경북)지역 생협 및 직거래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일	조합원 (회원)	자본금 (출자금)	직원	매장	매출규모
푸른평화	1990. 4	2,000여명	1억9천만원	15	6	40억원
곰내들 (직거래 단체)	2009. 1	600여명	1억원	1	1	1억5천만 원
농부장터 (직거래 단체)	2009. 1	500여명	5천만원	5	1	4억원
땅지기생협	2004. 4	500여명	7천만원	1	1	1억5천만 원
대구생협(아이쿱)	2001. 11	1,128명	9억3천만원	12	1	19억원
참누리생협(아이쿱)	2003. 10	1,330명	9억1천만원	14	1	21억원
행복생협(아이쿱)	2003. 11	1,621명	10억6천만원	22	2	45억원
녹색살림생협	2002. 7	911명	3억1천만원	3	1	21억원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1991.	없음	1억2천만원	5	1	10억원
대구 우리밀	2003. 4	없음	3억원	8	1	12억원
대구경북지역먹거리 연대(직거래 단체)	2006. 2	600명(단 체 12개)	3천만원	20	1	4억원
땅살림 생명살림 (직거래 단체)	2003. 10	없음		5	4	15억원
대구 한살림	1996.	800여명	2억원(가량)	4	1	5억원
안동가톨릭농민회 (직거래 단체)	1990.	120명	억원	15	없음	40억원
총계		10,110명	42억7천만원	130명	22개	239억원

주: 매출은 2010년 연간 규모이며, 일부 항목은 추정치임

자료: 김병혁, 류병윤(2011)의 조사자료

3) 지역밀착형 지표의 활용

사회적기업의 ‘지역밀착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지역내 구입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2개의 대구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중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중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사회적기업 14개 중 ‘거의 대부분을 지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이 10개사(71.4%)에 이르고, ‘절반 정도를 지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이 1개사(7.1%)였다.

<표 9>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지역 내 구입정도

지역 내 구입정도	빈도	비율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구입	10	71.4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구입	1	7.1
지역 내 구입은 절반이 안됨	1	7.1
지역 내 구입은 거의 없음	2	14.3
합계	14*	100.0

*주: 설문조사 응답한 기관 22개중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원자재를 구입하는 사회적기업 수
자료: 문순영(2010)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역주민에 대한 상품 판매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15개사 중 9개사(60.0%)에 이르고,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3개사(20.0%)에 달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16개사 중 10개사(62.5%)이며, ‘절반 정도를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2개사(12.5%)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밀착적 성격을 가장 적실하게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역주민 비율’은 ‘근로자를 거의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기업이 22개사 중 18개사(81.8%)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기업이 3개사(13.6%)에 이르렀다(문순영, 2010).

이는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지역재단의 조사 연구결과인 ‘지역 내 소재 대기업 10개소의 고용 근로자 중 지역주민 고용비율’과 비교해 보면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외지인, 지역주민 비정규직’이 50.0%이며, ‘대부분 지역주민, 정규직’이 25.5%, ‘절반정도 지역주민, 정규직’ 25.5%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가진 지역밀착형의 성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은 환경, 제조, 돌봄, 식품, 문화예술 등 모든 사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노인, 장기 실업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78.0%나 고용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23개 사회적기업에서 431명(자체고용 119명 포함)을 고용해, 1년간 약 67억7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경북지역 23개 사회적기업에서는 530명(자체고용 238명 포함)을 고용해, 약 13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살펴본 대구광역시와 경북북도의 지역 총생산 규모와 1인당 지역총생산액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생산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근로자 중 5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정책적 제언

최근 원유와 다른 원자재(식료품 포함) 가격의 상승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과열된 신흥시장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성장이 느려진 선진국 시장의 경우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신흥국에서는 석유와 식료품 가격은 물가 구성 요소의 2/3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매우 느슨해진 통화정책과 함께 신흥시장에서의 매우 강력한 성장은 사회적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선진국들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반면에 신흥시장은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 수요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르고 있는 반면, 여전히 세계경제는 재정, 환경에서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글로벌 수요패턴의 거대한 바위틈에 끼어 꼼짝을 못하는 형국이다. 시장에서 자생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경영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에 치중된 현재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나 국공유지 임대, 우선구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대책에는 구체적 신청절차와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김준양, 2010).

국세나 지방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또한 법규상의 지원사항들이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행정재량이 과도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의 주력계열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들의 지난 4년간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대 기업의 2010년 9월말 현재 고용 규모는 187,514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의 175,673명에 비교해 6.7%(11,841명)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보고서(2007년~2010년)를 분석해 보면 4년간 매출액이 50% 이상 늘었지만 고용 증가율은 9.9%에 그쳤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 가까이 증가했으나, 고용은 1.3% 증가에 그쳤고, SK텔레콤은 고용은 줄고 매출액만 10% 이상 성장했다. LG전자만 고용 증가율(9.4%)이 매출 증가율(3.9%)을 앞질렀다.

특히 '투자 대비 고용 효과'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8조4000억원(2007년)의 투자에 이어 21조2000억원(2008년), 15조8000억원(2009년), 28조원(2010년, 잠정치) 등 4년간 83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유발된 고용 규모는 10,000명이 되지 않았다. 특히 2007~2009년 사이에는 오히려 고용이 921명이 줄어들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연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2010년을 뺀 고용 증가

규모는 연평균 30명도 되지 않았다(한겨레신문, 2011. 1. 24).

재벌 대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여건의 악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 간 거래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한계를 보인다. 또한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 및 지원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기업 촉진을 위한 환경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일본의 경우 ‘신공공(NPO)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더 확산되는, 공공 시설물 및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리를 비영리법인(NPO)에 위탁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원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납골당 등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를 기존 광역시도나 시군 산하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의 위탁경영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법과 조례 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관리 경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김경휘·반정호, 2006. 10,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김성숙, 2010. 11,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김준양, 2010. 8, 사 「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문순영, 2010. 11, 「대구경북 사회적기업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이준영·오지선, 2010. 10,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기업」

채종현·최준규, 2010. 6, 「한국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 특성과 법·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2011. 5,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지원 5개년 계획」

고용노동부, 2008,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대구경북연구원, 2011. 1. 17, 「대경CEO Briefing」

대구광역시, 2009. 8,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중기계획」

매일신문, 2011. 2. 25 기사

한겨레신문, 2011. 1. 24 기사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b.go.kr>